

제주

한국정치의 바로미터 제주의 승리, 그 의미와 과제

고유기 |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정책실장

1. 총선 결과를 보는 시각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실망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선거결과로 맞본 좌절을 근거로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 만큼, 지난 4.11 총선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갈구하는 국민적 기대가 높은 선거였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새누리당이 또 다시 1당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과반의석을 넘기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승리와 더불어 2004년 대통령 탄핵 역풍이라는 ‘예외’를 제외하면 야권이 이토록 많은 의석을 확보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며 이를 희망의 근거로 제시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동서분단을 연상하는 이번 총선결과 나타난 민심의 지도를 놓고 지역주의 부활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진보개혁 진영의 불모지였던 부산에서 40% 수준의 지지율을 확보한 사실을 근거로 오히려 지역주의가 희석되는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선거결과가 ‘여춘야도’의 현상으로 드러났다면, 이는 미디어의 선거영향을 제기

하는 목소리도 나름대로 타당하게 들린다. 진보정당 스스로의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의 텃밭으로 기능해 왔던 울산, 창원 지역의 실패를 근거로 진보진영이 패배한 선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폭정 탓에 극대화된 국민 민심 이반이 곧바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한국 정치지형의 불완전성 자체에 기인한다는 진단도 제출된다. 한 마디로, 이는 야권이 수권능력을 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아직 한국은 보수가 기득권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렇듯, 선거결과를 두고 제기되는 다양한 분석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내지 못한 '실패한 결과'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듯하다. 그것의 진정성은 제쳐두고라도, 이명박 정부와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변신시켜가며 전개한 박근혜식 선거전략에 압도당한 전략실패와 차별성 있는 비전제시의 부재, 공천과정의 문제 등 국민신뢰에서 떨어진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노력의 요구도 겹쳐히 받아들여야 한다.

역대 선거를 볼 때 민주통합당은 '선택되어지는 정당' 이미지가 강하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2012 국민 의식 조사」, 2012. 2. 20~3. 5)에서도 이는 드러나고 있다. 즉,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는 연령, 학력, 소득, 남녀 불문하고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지지의 안정성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에 근거한 뚜렷한 지지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신당창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60%)는 조사결과도 이를 반증한다. 그러다 보니, 보수기득권에 대항한 '차선의 선택' 대상으

로서 늘 위치 지어지는 것이다. 선거결과를 놓고 당내 지도부 사이에서 정체성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앞서의 조사결과에서 한국사회의 지지성향도 지역, 세대와 같은 구정치 구조에서 이념, 정치참여, 주관적 계층의식과 같은 정체성 구조로 이동한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더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선택하고 싶은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체성의 확립과 이에 기반한 비전능력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절박한 과제일 것이다.

2. 제주의 선거, 의미와 과제

제주는 이번 총선 결과 민주통합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세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했다. 단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주의 국회의원이 내리 3선을 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 현역의원 모두 내리 3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이번 선거는 몇 가지 유의미성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2004년 이래 세 번의 총선에서 지역 선거구 전체를 민주통합당이 차지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보수기반의 회복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도 연전연패하며 지역에서 '무관'으로 전략한지 오래다. 1995년 이래 치러진 여섯 차례의 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다섯 차례나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돈 뭉치' 사건에 연루된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로 후보조차 내지 못했으며, 지방의회도 민주통합당이 다수를 점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보수세력에게 있어서 몇 석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느냐 하는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보수세력은 일찌감치 제주의 대표 선거구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갑 선거구를 승부처로 삼고 총집결했다. 아울러, 다선 경력의 후보를 재차 내세워 선거구 탈환을 꾀했다. 그러나 결과는 또 다시 좌절이었다. 제주는

적어도 15대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텃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6대 총선에서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세 선거구 중 두 선거구를 점하더니,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제주는 완전한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제주지역에 민주통합당 기반의 '착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는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 스스로의 혁신과제를 더욱 촉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를 앞둔 여론조사에서 제주는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재차 민주통합당 후보가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된 것은 현역 인물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를 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 부인의 금품선거 혐의로 공천 취소가 이뤄지면서 일찌감치 선거구도가 정해지면서 비교적 쉽게 당선되었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후보가 3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민주통합당 강세 지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갑 선거구의 경우는 새누리당이 다선 경력의 후보를 내세워 선거전이 초반빙의 양상으로 치달았지만, 기본적으로 '오래된 인물'에 대한 회의론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밑바닥 정서를 형성하고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제주의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민주통합당 지지에 따른 승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정당 지지율 면에서도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에 1% 정도 앞설 뿐이다. 제주의 이러한 결과는 대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 차원의 혁신과 비전주도를 통한 국민신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지를 보여준다.

셋째, 이번 선거의 승리는 현역 인물론의 작용과 더불어 정권 심판론도 일정하게 작용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통합당의 패배가 비전제시 보다 정권심판론에 기댄 전략의 오류였다고 지적되지만, 제주의 경우는 오히려 심판론이 현실적인 힘을

얻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른바 ‘제주 홀대론’이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이미 민주정부 시절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까지 이뤄진 제주4.3문제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분이 크게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혔는가 하면, 이미 특별법상 정해진 4.3 관련 예산지원에 조차 인색했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이어진 수구세력의 4.3 흠집내기와 몰역사적 준동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특히, 대통령은 4.3위령제에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참석조차 하지 않아, 공교롭게도 4.3 주간에 치러진 선거에서 이 문제는 큰 쟁점이 되었다. 여기에서 선거 초반, 50분 정도에 불과한 박근혜 위원장의 ‘깜짝 방문’은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와 다를바 없는 제주 무시를 드러낸 것이며, 특히, 4.3에 대한 입장도 한 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아 도민들을 무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강정마을에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한 일방강행 드라이브 또한 제주 홀대론을 강화시켰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육지 경찰’과견에 따른 일방적인 공사강행은 많은 도민들에게 4.3 당시의 육지 ‘응원 경찰’을 동원한 도민 탄압을 연상시킬 정도로 도민 정서를 자극했고, 도지사와 도의회, 심지어 새누리당 제주도당까지 나서 이뤄진 공사보류 요청도 일거에 무시되는 등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일방성과 강행논리도 정권 심판론에 한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었던 신공항 건설약속의 폐기, 영리병원 도입을 불모로 한 특별자치도 특별법 무력화 시도 등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내 동안 이어진 제주홀대, 무시론은 선거과정에 표심의 향방을 결정케 한 주요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넷째, 가장 박빙이었던 제주시 갑 선거구는 야권연대를 위한 단일후보 경선지역이었다. 서귀포 선거구 역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지역이었지만, 통합진보당 후보가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경선 전 사퇴해 야권연

대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때문에 제주시 갑의 선거는 제주지역 총선 사상 최초의 야권단일후보를 통한 선거가 이뤄진 사례가 되었다. 세 선거구 중 가장 보수색이 짙은 선거구라는 점, 초박빙의 양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결과는 야권연대의 효과도 일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민주통합당에 대한 대학생층의 지지율이 평균 지지율보다 10% 이상 낮고, 그 요인이 대학생층이 진보통합당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는 앞서 민주정책연구원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상기한다면 이번 야권연대의 사례는 대선 등 향후 국면에서도 중요한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한국정치의 바로미터, 제주

제주는 ‘한국판 뉴햄프셔’라고 할 만큼, 한국정치의 향방을 가르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얘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전국은 패배했고, 제주는 승리했다. 그러나 이는 현상이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여진 ‘길목 현상’즈음으로 받아들이자. 비록 패배했다고는 하나, 민주통합당은 언론이 막히고 소통이 거부된 이명박 정부 치하에서 국민의 민심을 등에 업고 127석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공천과정의 불화로 인한 국민기대의 추락, 민간인 불법사찰,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 프레임 이슈에 대한 미숙한 대응 등 악재를 초래한 면도 있지만, 민심은 여전히 정권심판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끌어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한 실망이 앞서는 것이다. 패배로 나타난 이번 결과는 좀 더 진지한 성찰을 동반한 권토중래의 요구인 셈이다.

제주의 결과는 그런 면에서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열망과 요구를 앞서 드러낸 것이다. 제주의 승리는 제주의 선거가 현역 인물론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이명박 정부의 제주홀대라는 강력한 특수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지만, 일찌감치 새누리당 강제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객관적인 지형과 제주 새누리당 보수의

총력결집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승리라는 점에서 대선 정국을 앞둔 한국 정치의 바로미터로 삼을 만할 것이다.

따라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주고, 이의 수행능력을 국민들에게 인정받느냐 하는 주체로서의 문제가 남았다. 역으로 이는 다시 제주지역 정치지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는 민주·개혁기반의 착근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대선결과에 따른 영향으로 또 다른 양상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만일, 대선에 패배하게 된다면 여전히 잠재한 지역 보수층의 활로를 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일례로, 최근 진행 중인 제주도의회 도정 질의 과정에서는 벌써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 무소속 도지사의 여당 입당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다. 그렇지 않아도 1% 변방이니, 제주홀대니 하는 담론이 큰 사회에서 대선에서 정권회복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제주는 또 다시 새누리당-보수세력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는 제주의 현안인 4.3문제나 해군기지 문제 등의 해결도 요원하게 만드는 일이다. 제주의 정치지형에 있어서도 이번 대선이 중요한 이유다. 제주지역 스스로도 제주가 여전히 정당선호에 비해 인물선호가 높은 지역(민주정책연구원 국민의식조사 결과)임을 감안할 때, 제주도당 차원의 혁신과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